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6건)

- ① 7월 23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생각함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 의견수렴 ('20.7.23)
- ② 올 상반기 71개 법령 155건 부패위험요인 개선 권고 ('20.7.16)
- ③ 국민권익위원회, '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Asia-Pacific Stevie Awards)'에서 정부 혁신경영상 금상 수상 ('20.7.15)
- ④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더 쉬워진다. ('20.7.7)
- ⑤ 온라인으로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에게 대면으로 상담 받는다. ('20.6.30)
- ⑥ 제7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열려...안전 분야 반부패 성과 등 공유 ('20.6.30)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렴정책 일반)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부동산 대책 · 대학등록금 반환 등 사회 현안,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앞장서겠습니다!

- 23일부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 의견수렴 -

(2020. 7. 23, 국민권익위)

주택문제, 아동학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 등 국민 관심이 높고 사회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 벗고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부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7월경에 실수요자 대출, 세제 완화 등 부동산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5천여 건 접수됨에 따라 '부동산 대책' 문제를 첫 사회 현안으로 다룬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 등 국민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하여 고충 민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회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 중 매월 1~2건의 현안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토론·설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국민·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공청회·간담회 등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해 정책이나 제도의 사각지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가 직접 제도 개선을 추진하거나 관계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갈등 조정에 나선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사회 현안 중에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많다.”라며,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인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정책제안 등을 모두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 설문조사 화면]



올 상반기 71개 법령 155건 부패위험요인 개선 권고

- 60개 사규 개선안, 30개 공공기관과 함께 마련 -

(2020. 7. 16,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010개 중 71개 법령에서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 개선 권고(49개 법령, 103건)보다 약 5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선권고의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42건, 27.1%) ▲공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41건, 26.5%) ▲국민의 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예측가능성 제고(28건, 18.1%) 등이다.

<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	행정 절차	7. 접근의 용이성	10
	2. 제재규정의 적정성	9		8. 공개성	12
	3. 특혜발생 가능성	1		9. 예측 가능성	28
집행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42	부패 통제	10. 이해충돌 가능성	41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0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
	6. 재정누수 가능성	-		합 계	155

사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여부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위험이 있고, 위원의 이행충돌방지 장치 규정이 없어 심의안건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횟수 규정 및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기술의 구체적 자격요건, 시설에 필요한 규모, 필요한 인원 수 등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30개 공공기관과 함께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 60개 사규 개선안 중 한국동서발전의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 신설’ 등 계약분야 4개, 한국환경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신설’ 등 감사분야 2개 등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 사규 개선안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로 배포할 예정이다.

< 우수 사규개선안 >

기관명	사규개선안	분야
한국동서발전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 신설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계약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협약서 표준안 마련 -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부당 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해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사규 개정	계약
한국농수산물품유통공사	-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부가 기준 마련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부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인천도시공사	- 퇴직자와 특혜성 수의계약 사전 차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퇴직 예정자의 경우 퇴직 이후 청렴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의무화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 운영지침」에 필기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시험 문제와 정답가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 사유 등 예외 조항 삭제	시험
한국환경공단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징계 감경 금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인사규정」에 명시	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감사인에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보고의무 부과 「감사규정」에 감사인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기인사 시기 및 기준을 사전 공지해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 「인사관리규칙」에 정기인사 시기를 특정하고, 직원의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인사운영 방향 및 기준을 공지하도록 하는 등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	인사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과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태 스티비 정부 혁신경영상 금상 수상

- 공정·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 높이 평가받아 -

(2020. 7. 15,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2020 Asia-Pacific Stevie Awards)’에서 정부 혁신경영상(Award for Excellence in Innovation in Government) 부문 최우수상인 금상을 차지했다.

스티비 어워즈는 국제 비즈니스 대상, 아태 스티비상을 포함하여 8개 시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1만여 개 이상의 출판물을 받아 뛰어난 성과를 보인 사람과 조직을 선정하는 국제적 시상식이다.

이 중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은 2013년부터 아태지역 29개국의 모든 기업, 단체, 정부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조직과 성과에 대해 부문별로 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아태 스티비상은 ‘혁신(Innovation)’을 키워드로 선정해 지난 2년간 조직 운영 실적 전반에 대해 혁신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아태지역 20개국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이 1,200여개 출판물을 응모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혁신경영상(종업원 100명 이상) 부문에서 고객서비스 분야, 홍보 분야, IT 분야의 운영 성과와 혁신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고객서비스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 점검 및 개선대책 마련,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5인 이상의 집단민원 집중 해결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홍보 분야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홍보와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AI 기술에 기반하여 새롭게 개통된 국민권익위의 차세대 국민신문고(민원·정책소통창구) 등에 대해 좋은 평가가 이뤄졌다.

아태 스티비상 정부 혁신경영 부문 금상 수상은 공정·청렴정책의 끊임 없는 추진과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다가갈 수 있도록 업무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당초 오는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악화되어 9월 22일(화) 온라인(asia.stevieawards.com)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더 쉬워진다.

- 전문자격증, 희망상담분야 등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 -

(2020. 7. 7, 국민권익위)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다 쉽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문변호사의 공익활동 경력 외에 전문분야, 자격증, 희망상담분야를 추가 공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49명)을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자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자문변호사의 지역별 소속회와 공익활동 경력 정보 위주로 공개해 왔다. 이 정보로는 신고내용에 적합한 자문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신고자와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분야(○○전문변호사)와 자격증(예. 의사, 변리사 등) 정보를 추가했다.

또, 효율적·전문적 상담이 이뤄지도록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공익침해 행위 6대 분야를 기준으로 ‘희망상담분야’를 신설·공개했다.

이번에 개편된 자문변호사 정보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 - 신고제도안내 - 비실명대리신고 -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걱정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로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자문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에게 대면으로 상담 받는다

- 온라인 법률상담 전문변호사 52명 위촉...심층적 상담 실시 -

(2020. 6. 30,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법률상담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센터장 황호윤)는 온라인 민사법무 상담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법률상담은 매체의 특성상 추가 질의가 어렵고 구체적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신청인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단순 안내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신청인의 불만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사·법무 분야 온라인 상담 건수>

계	'19.10월	11월	12월	'20.1월	2월	3월	4월	5월
818	42	51	70	150	98	77	122	208

이에 센터는 온라인상담 전문 변호사를 확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52명을 추천받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센터의 서울민원실에 배치돼 온라인에서 전환된 법률 문의에 응대한다.

온라인 민사법무 상담은 상담관이 내용과 지역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으로 전환한다. 상담관은 변호사와 신청인의 일정에 따라 상담일을 예약하고 신청인은 예약된 일시에 센터에서 방문 혹은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제출된 온라인 문의를 상담 변호사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신청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법률상담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나 센터 홈페이지에서 민원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그 밖에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서울민원실에 방문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황호윤 센터장은 “센터의 설립 취지는 국민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상담에 대해서도 양질의 답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해 행정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7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열려...안전 분야 반부패 성과 등 공유

-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와 9개 생활적폐 개선

성과 논의 -

(2020. 6. 30, 국민권익위)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이진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7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안전 분야 부패근절 업무 추진현황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9개 생활적폐 개선 추진 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안전분야 부패근절 업무 추진현황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제천 복합건물 및 밀양 병원 화재, 크레인 전도 등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안전 문제를 반부패정책의 관점에서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과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생활적폐 과제로 선정해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과제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18년 10월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는 구성하여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존 규제의 완화·폐지 또는 규정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규제를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또 국민이 직접 안전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민 참여 중심의 반부패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및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탈세행위 근절 등 9개 생활적폐 중점 과제와 관련 제도개선 등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0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 관련 법률 제·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적폐 과제 관련 주요 입법 과제 >

과 제 명	주요 입법 과제	
학사비리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의 타 학교법인, 공립학교와의 교류 근거 마련
유치원 공공성	유아교육법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등
채용비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가족채용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
보조금	보조금법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정수급	공공재정환수법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
탈세근절	금융실명법, 상법	금융기관 등 전표 보관기간 연장(5년→10년)
의료기관	의료법	사무장병원 폐쇄명령처분 승계제도, 사무장병원
보험비리	국민건강보험법	채납자 의료법인 임원취업 제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법	사무장병원 압류시기 단축, 사무장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도입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주비리 제재 강화

끝으로 협의회는 각급기관 및 국민으로부터 공모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공유하면서 각급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이진리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협의회는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